

정직하고 투명한 인용

사실 확인, 기사 인용 원칙부터 확실히 지키자



배정근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뉴스 기사는 저널리즘의 현실을 스스로 말한다. 시민의 신뢰가 추락하는데도 기사의 품질이 제자리걸음하는 이면에는 잘못된 취재 보도 관행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시급히 바뀌어야 할 대표적 관행을 짚어보고 올바른 보도 원칙을 제시한다. 이 기획은 저널리즘 품질 향상을 고민하는 ‘좋은저널리즘연구회’ 회원들이 돌아가며 집필한다. 첫 번째 글은 ‘정직하고 투명한 인용’에 관한 이야기다.

요즘 뉴스에서 부쩍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관행’이다. 그런데 그 쓰임새는 매우 부정적이다. ‘갑질’, ‘불공정’, ‘리베이트’, ‘전관예우’처럼 불명예스럽고 지탄받는 행위에 따라붙는다. 긍정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라 해도 무언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웅변한 변명이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관례처럼 행해져온 일을 의미하는 관행은 개인과 집단의 행동방식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이다.

언론학에서도 뉴스 생산 관행은 언론이 어떻게 뉴스를 만들어내며, 그 과정에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언론학자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는 뉴스 생산 관행을 언론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정형화되고, 관습적이며, 반복되는 활동과 형식’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행은 뉴스 발생의 불확실성, 마감시간, 취재 가능성 같은 수많은 제약 속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

으로 뉴스를 생산해야 하는 언론조직의 요구에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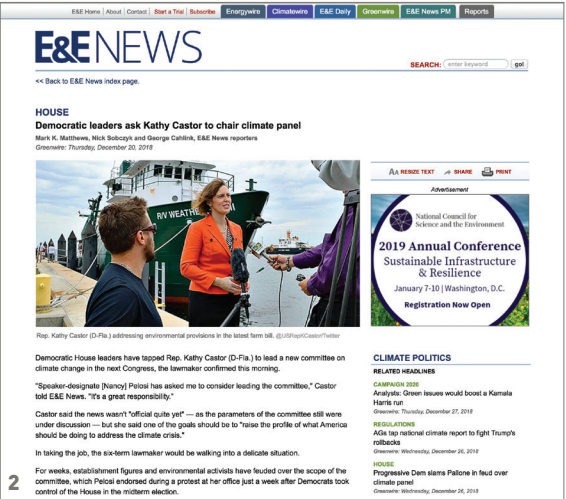
언론 보도가 조직적 관행의 산물이라는 시각은 뉴스가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언론에 의해 만들어지고 구성된 현실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뉴스 관행은 뉴스 수집, 가치판단, 게이트키퍼, 제작방식, 보도방식 등 언론의 취재 보도 활동 전 과정에 걸쳐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뉴스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조직적 관행의 산물

언론은 우리 사회의 구시대적이고 불공정한 많은 관행을 매일 비판하지만, 언론 내부에도 저널리즘의 원칙과 가치를 저버리는 잘못된 관행이 산적해 있고,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오보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다. 문제의 오보는 연합뉴스가 중국 선양의 ‘한 교민’의 전언을 근거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선양을 거쳐 평양에 들어



1 민주당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워싱턴포스트의 기사. E&E New를 기사 링크와 함께 인용했다. 해외 언론사들의 기사의 출처를 본문에 함께 링크해 독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모가 큰 언론사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 <출처-워싱턴포스트>
2 워싱턴포스트의 기사 본문에 표시된 링크를 누르면 인용 출처인 E&E News의 기사 화면으로 연결된다. <출처-E&E News>



갔다고 보도한 것이다. 기사는 비행기 편명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그 시점에 서울에 있었고, 언론사의 사실 확인 전화에 일일이 응대했지만 사전에 연합뉴스와는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고 한다.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 확인이라는 취재의 기본절차도 지키지 않은 어설픈 기사였다. 충실한 사실 확인보다 속보 경쟁을 우선시하는 한국 언론의 고질적 관행이 빚어낸 참사다. 다른 언론도 아니고 뉴스의 도매상인 연합뉴스가, 혼자만 취재한 사안을 이렇게 성급하게 보도한 배경과 내부 게이트키퍼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는 통신사도 제휴사에 대한 뉴스 공급보다 포털 공간에서 다른 매체와의 속보 경쟁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그러나 이 오보 사태에서 정말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낸 언론사는 따로 있었다. 많은 언론사들이 이 오보를 그대로 보도했지만, 일부 언론사는 연합통신을 인용하지도 않은 채 마치 자신들이 취재한 내용처럼 보도했다. 이들 언론사에는 놀랍게도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와 유력 신문들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온라인에만 보도되고, 곧바로 삭제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갔을 뿐이다.

이 사태가 보여주듯 국내 언론이 시급히 시정해야 할 잘못된 보도 관행은 뉴스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거나 취재원을 올바르게 인용하는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뉴스는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어났다고 말한 것’이라는 언론학자 레온 시갈(Leon Sigal, 1986)의 말은 뉴스에서 취재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뉴스가 본질적으로 취재원의 말을 인용하는 전달양식임을 일깨워준다. 따라서 취재원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적시하고, 그 발언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는 것은 기사 작성의 초보적 원칙이다. 마치 글쓰기에서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이치와 같다. 열거하자면 끝도 없이 많을 한국 언론의 잘못된 관행 가운데 이 문제를 특히 중요하게 거론하는 이유다. 박재영, 이완수(2007)는 ‘인용은 기자가 제3자적 관찰자로서 보고 듣고 얻은 정보로 기사 내용이 구성됐음을 증빙하는 도구이며, 취재원 적시는 그런 정보의 원천과 입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무시되는 취재 원칙

출처 공개와 정확한 인용 원칙은 모든 기사 내용에 다 적용되고,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의 문제들이 내포돼 있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현상이 언론 상호 간의 인용과 출처 적시 관행이다. 타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를 아무런 출처와 인용 없이 그대로 베껴 쓰거나 표절하는 행태가 언론계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 유형이 연합뉴스 같은 통신 기사를 거의 전문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이다. 특히 통신사와 전제계약을 맺고 있는 언론사 사이에서는 이를 당연시하는 경향마저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표절행위다. 여러 언론에 난 기사를 조금씩 짜깁기해서 쓰는 기사 역시 정도는 덜해도 마찬가지 표절이다. 일부에서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는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이나 논조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기사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례다.

또 다른 빈번한 유형은 타사 기사를 인용하면서 해당 언론사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는 경우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신문 보도에 따르면’ 식으로 넘어간다. 그렇지만 인용한 내용이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소송 등 당사자 반발이 우려될 경우에는 인용한 언론사 이름을 적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노고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책임 소재는 그쪽에 넘기려는 알박한 태도다.

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매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1998년 발표된 이 신문의 ‘정직성(integrity)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타 언론의 뉴스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뉴욕타임스 독자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공간적 제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언론 보도를 인용할 경우 그 언론사를 적시해야 하며, 이는 통신사 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못 박고 있다. 특히 타 언론 보도를 확인해서 자체적으로 쓰는 경우에도 ‘정직성과 타사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기사에 밝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와 타 언론사 보도 표절금지 원칙(제8조)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매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1998년 발표된 이 신문의 ‘정직성(integrity)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타 언론의 뉴스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뉴욕타임스 독자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합뉴스

“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매년 전 세계 3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언론 신뢰도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사회적 자본으로 표현되는 신뢰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것은
언론 자체뿐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다.

기사의 출처와 보도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투명하게 밝히는 자세는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언론 윤리 기준이다. 미국의 저명 언론 연구기관인 포인터연구소는 그동안 ‘언론인을 위한 지도원칙(Guiding Principles for Journalists)’으로 ‘진실성’, ‘독립성’, ‘피해 최소화’ 세 가지를 제시해 왔으나 2013년 이 가운데 ‘독립성’을 ‘투명성’으로 대체했다. 누구든지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 생산자의 독립성은 모호해지고 있으며, 저널리즘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더 중요한 기준은 투명성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투명성 원칙의 첫 번째 권고는 이렇다. ‘어떻게 취재했으며, 왜 사람들이 신뢰해야 하는지를 보여 줘라. 취재원과 증거 그리고 여러분이 내린 선택을

설명하라.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부분을 밝혀라. 지적 정직성을 지침으로 삼고, 겸손함을 자산으로 삼아라.’ (임영호 역, 디지털시대의 저널리즘윤리, 4쪽)

부각되는 보도 투명성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이제 시민들은 뉴스의 출처와 원본을 언론인과 거의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기자들에게 배포되는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는 곧바로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민간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와 자료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해외 명망 있는 언론사들은 기사의 출처가 된 원자료 또는 그 출처를 기사 본문에 링크해 독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모가 큰 언론사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들 언론사가 부가적인 투자와 노고를 감수해 가며 기사의 출처와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까닭은 당연히 독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다. 언론의 생명이 신뢰에 있음은 상식이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매년 전 세계 3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언론 신뢰도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사회적 자본으로 표현되는 신뢰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것은 언론 자체뿐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불신은 취재 대상에게는 엄격한 원리원칙과 가혹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언론이 정작 자신들은 원칙도 없고 비윤리적인 취재 보도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국내 언론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독자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뉴욕타임스의 윤리규범은 매우 상세하고 방대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를 통해 확보하려는 가치도 바로 정직성이다. 정직한 보도는 투명한 보도에서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 인용과 적시라는 기본원칙부터 확고한 관행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